

■ 19대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국민 100인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19대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 “많은 변화가 기대되지만, ‘나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매우 미흡합니다.”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7. 4. 25.(화) 오전 11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19대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 “많은 변화가 기대되지만, ‘나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매우 미흡합니다.”

- ▲ 2017년 4월 19일,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 진행.
- ▲ 18대 대선과 비교할 때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은 많이 나아져, 사교육 문제 해결 변화의 가능성은 높아졌음.

- 대부분의 후보들이 외고, 자사고 등을 폐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입시제도에서 우선 선발 특혜를 없애고 일반고와 전형시기를 일치시킴. 그러나 외고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말의 의미, 입시 제도의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음. 전형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킨다 해도 선지원 후추첨 전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고입 준비 사교육비는 생각만큼 줄지 않을 것이기에,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분명한 개선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해야 함.
-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를 법률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벌을 얻기 위한 대입경쟁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대학입시의 경우, 논술고사 및 특기자 전형 폐지(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을 포함해 대입제도를 학생부 전형/수능 전형 등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의 경우에도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거나(문재인, 심상정 후보), 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로 전환을 약속함.(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

- ▲ 고교 수강신청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중학교 교사별 평가, 교장 공모제 등 학교 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함.
- ▲ 반면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한 상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및 학원 일요 휴무제,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외의 경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 ▲ 이번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후보들이 4월 28일까지 공약을 수정해서 제시하면 우리 단체는 5월 4일 수정 사항을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19일(화) ‘2017년 대선 사교육 경감 공약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고통 경감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내놓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4월 19일 평가단들의 충실한 평가를 위해, 우리는 먼저 “국민이 추천하는 16개의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과 함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정리해서 후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국민 추천 사교육 공약과 대비시키는 대조표를 작성해서 현장 평가단 참여 국민들에게 보내 서류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각 후보 진영 공약 책임자들을 불러 토론을 진행하여 최종 평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실시한 평가 컨퍼런스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후보들의 공약 평가 방식

- 100인 국민평가단의 직접 평가를 위한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지지율 5% 내 후보 측의 책임자를 초청해서 현장 평가를 진행.(리얼미터, 한국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코리아리서치센터 등 4월 9~10일 발표 결과 참고)
- 국민 추천 16개 사교육 공약에 대해서 각 후보 진영이 제대로 수용했는지, 수용 여부를 넘어서 제대로 된 적극적 공약을 제시했는지, 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 경감에 진정성을 담은 공약인지를 확인하며, 동시에 개별 공약들이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
- 평가단들의 평가 결과 가운데, 국민 추천 16개 공약 수준에 비추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추천공약 수준에 매우 근접한 내용의 완결성을 갖추었거나, 다른 후보들의 답변과 유사한데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공약 검증단(약칭 ‘본 단체 정책위원회’)이 이를 보정해 *표로 표시. (문재인 후보 1개, 홍준표 후보 2개)
- 지지율 5% 이하(4월 10일 기준) 후보들의 경우(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해당됨) 서면평가를 토대로 본 단체 정책위원회가 평가하여 이를 통합함.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총평

□ 18대 대선과 비교할 때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고교 유형 단순화 및 고교 입시 일원화, 2021 수능 절대평가 등)은 많이 나아져, 사교육 문제 해결 변화의 가능성은 높아졌음.

18대 대선 때 사교육 경감 관련된 공약은 전반적으로 부실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선행교육금지법’과 ‘입시에서 학교 밖 스펙 자료 제출 금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집권 후 역대 가장 큰 폭의 사교육비 증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실한 공약이 가져온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보니, 18대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보다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공약도 우수하여, 19대 대선 이후 사교육 문제는 과거보다 많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교육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인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를 법률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고(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포함), ▲ 지방과 수도권 격차 해소 및 고졸 출신 채용 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 취업 시장의 공약들 중 긍정적인 것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후보들은 중학교 사교육 폭증의 온상이 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거나(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학교 유형을 그대로 두되(안철수 후보의 경우, 과학고는 위탁교육체제로 전환) 선지원 후추첨 등으로 중학교 입시제도에 변화를 줄 것(안철수 후보)을 약속했습니다.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에 의하면 초등 24만원, 중학 27.5만원, 고등학교 26.2만원으로 중학교 사교육이 가장 높는데, 이는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경쟁이 격화된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후보들의 공약처럼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과학고를 위탁교육체제로 전환하거나, 학교 유형을 존치하고 입시를 선지원 후 추첨형으로 바꿀 경우, 중학교 사교육비는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발 시기 일원화와 선지원 추첨제가 동시에 병행 적용되지 않고 어느 하나만 도입할 경우, 고입 입시 사교육비 감소는 그만큼 한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학입시의 경우, 논술고사 및 특기자 전형 폐지(문재인 후보 = 논술/어학, 과학특기자 전형 모두 폐지, 안철수 후보=논술/특기자 중 어학특기자전형 폐지, 유승민 후보=논술고사 폐지) 등을 포함해 대입제도를 학생부 전형/수능 전형 등으로 단순화하고(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교사 추천서 폐지 및 자기소개서, 면접 등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폐지하며(문재인 후보), ▲수능의 경우에도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거나(문재인, 심상정 후보), 자격고사화하게 된다면(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 대입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교 수강신청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중학교 교사별 평가, 교장 공모제 등 학교 교육 혁신에 의미있는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함.

대선 후보들의 학교교육 내실화 관련 공약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전면 도입해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평가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했으며(문재인 후보), ▲고교의 경우 학점제 / 수강신청제도 등의 운영(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지를 넓히고, 이러한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꾀하고 교사별 평가(문재인, 심상정), 과정 중심 평가(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특히 특목고, 국제고 등 학교 유형이 단순화되거나 추천형 고입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교는 서열화 되지 않으면서 교육은 다양하게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교장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이런 학교 교육 운영을 위해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도(교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으니(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이 제도가 함께 맞물릴 경우 학교교육 혁신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학원업계를 의식해 부실한 상태. 그중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의 경우, 학원선행교육 상품 규제,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등 긍정적 반응 보임.

그러나 이번에 대부분 후보들의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학원 선행교육 상품’ 같은 교육계 대표적 적폐인 나쁜 사교육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해결하는 교육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 진도보다 1~10년 빠른, 백해무익한 학원 선행 사교육 프로그램’에 매어 살고, ‘월화수목금금금, 일요일까지 학원 뽕뽕이 가는 부담’ 속에 고통을 안고, 게다가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고단한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위 이런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절박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교육공약을 확인해 보았더니, 후보들은 국민들이 공약으로 추천했던 나쁜 사교육 해결 대책 관련 공약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학원 일요 휴무제, 학원선행교

육 금지법 찬성) 모두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쁜 사교육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다른 좋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를 초등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서 실제 일요일 학원 교습 대상인 중, 고교에 적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와 관련해서도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법률화한다는 약속 대신,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최초 답변서에는 나쁜 사교육 규제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컨퍼런스 2일 전 보내온 최종 답변서에는 관련 공약 도입을 전부 취소함으로 실망한 평가단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마다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그에 알맞은 학교 교육 변화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밤 12시까지 또 일요일까지 학원 사교육에 가두어 놓은 채, 정답 찍기 위한 암기 식 반복 학습 노예로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창의교육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창의적 인재로 키우려면 먼저 아이들을 묶어놓은 사교육 사슬부터 풀어주어야 합니다.

■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총평

□ 문재인 후보 :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관련 좋은 공약 제시(특히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등에서 우수함),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은 미흡.

문재인 후보는 전체적으로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교육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 후보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초중학교 사교육을 부추겼던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과학고는 특목고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을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의 입장이라 하였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킹, 연합된 국립대들의 공동선발-공동학위 수여, 공영형 사립대학의 네트워킹화 등 비교적 구체적인 대학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의 질 담보를 위해 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하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치하여 실효성있는 대학평가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더욱 개혁적인 방안으로는 ▲입시와 취업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확실히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해 ‘아동인권법 제정’ 외에는 전반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에게만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적정 교습시간을 권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휴일 학원 수강 비율이 심각한 중고등 학생에 대한 휴일휴무제 도입은 방치하고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시도 조례로 학원 영업시간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정 교습시간보다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더 늘리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선행 상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하여,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 의지가 미흡합니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영유아 아동 뿐 아니라 아동 전반의 과도한 사교육 규제와 휴식시간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들에 대해서는 매우 선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고단한 삶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후보라면 학원 업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공약을 내걸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은 핵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실시와 평가 혁명은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지점인데, 고교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에게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학점제의 취지는 학교 교육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사별 평가의 도입도 타당합니다. 다만 학점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조건에 대한 로드맵, 특히 고교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교장 공모제 문제에서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나, 구체적인 목표 특히 비율 조정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는 법적 구성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국가교육회의로 개혁 과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는 타당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수업 2교사제의 경우는 뒤처지는 아이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문제의식과 노력은 타당하나, 보조교사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재정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보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 **홍준표 후보** :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관련해서 공약들이 부실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함.

홍준표 후보는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교육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 공약들이 사교육 경감 관련된 문제의식이 예리하지 않고, 개선 의지도 없었습니다.

먼저 홍 후보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공약과 관련해서, ▲특목고·자사고에 대해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재학생들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하며 이들 학교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선 의지가 없었습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시 전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하였으나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개선책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서열화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은 다소 가지고 있었으나 제시한 해결책들인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MOU 체결로 인적·물적 교류’, ‘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선의의 경쟁’ 등은 서열화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안이한 대책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입시와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제정보다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미온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사교육 경감 국민 제안 16개 과제 중 ‘자유학기제 확대’ 부분을 제외한 15개 공약 모두에 대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모색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평가단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중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실제적 규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원의 선행 상품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법적 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학부모들의 의식의 문제로 보고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여 대신 공약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교육 공약은 문제의식과 대안

에 있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떨어집니다. ▲교장공모제, 평가개선, 수포자 및 영포자 문제,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에 있어 공약이 없거나, 공약이 있어도 피상적인 문제 해결에 그쳐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명확히 밝힌 내용 중에 ▲긍정적인 공약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자유학기제 확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교육부는 집행과 감독으로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정책의 책임을 누가 맡느냐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은 듯합니다. 자유학기제의 경우는 수업 개선의 가치에 대해서 잘 짚었으나, 오히려 공약 책임자는 이런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한계를 보였습니다.

□ 안철수 후보 : 사교육 경감에 도움되는 공약들이 많으나,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이 부실.

안철수 후보는 전체적으로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많은 영역에서 교육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보내온 답변서에 담긴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이 최종 답변서에 빠진 부분이 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 후보의 경우,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고교 체제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 대책들은 개혁적 공약들이 많았고, 대학 체제 개편 과제는 문제 의식은 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다소 미흡합니다. 우선 ▲고교 체제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즉 과학고/영재고는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위탁교육기관화 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선지원 후추첨한다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고와 전형 시기를 일치시키지 않고 우선 선발만 적용한다면, 이는 현재 국제중과 같은 위상으로서 특권학교로서의 지위는 지속될 것이고 그만큼 사교육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대학별 논술고사/어학 특기자전형 폐지, 수능의 자격고사화, 정부 내 ‘입시 공정을 위한 학생·학부모 보호위원회’(가칭) 설치, 교사추천서 폐지 등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제를 5-5-2로 개편하여 자율 진로탐색 기록부에 의한 대학 진학을 하면 사교육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평가단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세계 수준의 지역별 거점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 지정 및 육성’, ‘건전 사립대 정부 지원 확대’ 등 실효성이 미약한 공약들 가운데, 의미있는 대책으로는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의 지역 공공기관 우선 선발권 확대’ 정도가 보였습니다. ▲입시와 취업 등에서 지원자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민간 기업에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였습니다.

사교육 경감 과제와 관련해 안후보측이 2차에 걸친 공약 답변서를 보내면서 최종 답변서의 내용이 1차 답변서의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쁜 사교육 해결 과제가 두드러지게 후퇴하였습니다.

1차 답변서에는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및 학원 심야 영업 시간 제한, 학원의 선행 상품 규제,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모두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으나 최종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의 건강과 휴식을 택하기보다 표를 가진 이익집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가 건설을 누구보다 주장하는 안후보가 ‘월화수목금금금’ 씬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구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교육 공약은 비교적 긍정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병설 유치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까지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교장 공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학교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 논서술형 평가, 과정형·참여형 수업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학교 교육 내실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구체적입니다. 다만, ▲학제 개편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대입 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학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기간 소요 등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 유승민 후보 : 입시 경쟁 유발하는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며,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이 부실.

유승민 후보는 전체적으로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여러 영역에서 교육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방향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대입을 학생부와 면접/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며, 초중고 교실의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는 등,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공교육 체제 개선에 대한 방향은 옳게 잡았습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전략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져서,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 후보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 해소 방안과 관련해, 대부분 긍정적인 개선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고교체제 개선과 관련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대입을 학생부와 면접/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 해소나 대학 교육 혁신 방안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등, 별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쁜 사교육 규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원휴일휴무제는 구체적 내용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학원의 선행상품 금지와 영유아인권법 제정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 밝혀, 나쁜 사교육 규제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일지라도, 당장의 지나치거나 해로운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의 해소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관련 공약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 교육 공약은 의미가 있으나, 핵심적인 항목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초중고 평가의 개선 공약을 보면, △팀 프로젝트 강조하고, ▲객관식 지필고사 축소, ▲결과 아닌 과정중심 교육 등의 내용적 요소는 긍정적이지만 본질적인 교사별 평가와 고교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수포자, 영포자 격차 해소방안에서도 ▲‘거꾸로교실’ 등 다양한 수업 방식 도입하고,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등은 의미 있지만, 본질적인 제도 변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수강신청제 도입도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선결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무학년제 전환도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특기할만한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제도 법제화는 자주 바뀌는 교

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을 잘 담았지만, 어떤 상태에서의 법제화를 뜻하는지 계약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그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 심상정 후보 : 학원 선행교육금지법 및 학원 일요 휴무제 등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도 약속하고,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관련 좋은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전략이 부족함.

심상정 후보는 사교육 경감 관련 좋은 공약들이 제시되었고, 학원 선행교육금지법 및 학원 일요 휴무제 등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을 약속한 것이 전체 후보들 중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교육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향은 적절했습니다. 다만 공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 전략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심 후보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개선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초중학교 단계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외고 국제고 입시 관련,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의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고 등의 입시 제도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대책으로, 외고 등의 입시제도의 개선 효과가 반감되는 공약이라고 평가됩니다.

▲대입은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등 3가지로 간소화하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과 내신 성취평가제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른 기회 대입 전형을 현행보다 2배 늘린 22%로 하고 주요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을 합쳐 50%가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방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었지만, 대학의 질 담보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학력이나 학벌 차별을 막기 위해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였습시다만 입시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은 누락되었습니다.

심 후보는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학원일요휴무제와 비정상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실시하고 학원 심야교습을 시도별 차이가 없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며 ▲비정상 선행학습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치원,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행·재정적 조치와 처벌을 약속하였고 ▲‘유아 영어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일종으로 선행학습 제한의 대상으로 삼아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부담이나 인권 침해가 근절되

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유아 인권법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아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 교육 공약은 방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고 평가와 관련해서 ▲절대평가, 서술·논술평가, 과정·교사별 평가 개선,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수업-시험-학생부 일체화 등 평가 개선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개선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수준으로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포자, 영포자 격차 해소방안에서도 ▲수학·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기초 지자체 당 1곳 이상 학습종합클리닉 확대 ▲교육복지우선사업 내실화·확대 등의 공약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 및 지자체를 넘어 학교 단위의 보다 내실화되고 촘촘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세부 공약별 각 후보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표

☑평가단들의 평가 결과 가운데, 국민 추천 16개 공약 수준에 비추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추천 공약 수준에 매우 근접한 내용의 완결성을 갖추었거나, 다른 후보들의 답변 수준과 유사한데도 평점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 단체 정책위원회 공약 검증단이 이를 확인해 상향 보정함(*표 부분)

☑오렌지색 박스 부분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나쁜 사교육 근절 대책 영역.

분류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16대 공약 관련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입시 경쟁을 추기려는 학교 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1.고교 체제 단순화 및 고교 선지원 후추첨 전면 도입 등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2. 수능 절대평가 혹은 대학입학보장제 등 혁신적인 대입 제도 개선 방안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2-1.대학 서열화 해소 및 완화 대책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3. 질 높은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4.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는 대책	매우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5. 고졸자·지방대 출신자 등의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대책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6.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직업 간 임금 차별 획기적 완화 대책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7. 심야 학원 학습이나 일요일 영업 등 학생 쉼을 위협하는 학원 영업 시간 제한 방안	미흡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8.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 방안	미흡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매우 적절하게 반영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9.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영유아의 과도한 학원 사교육 부담 문제 해결 방안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10.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70% 확대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11. 자격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확대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12. 창의적 인재 양성 위한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 극복 방안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13. 현행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전체와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14.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 해소 위한 방안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15.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적절하게 반영	매우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미흡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기타 방안	16. 국가교육위원회 등 독립적·장기적 정책 실행 방안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적절하게 반영
----------	-----------------------------------	------------	-------------	------------	------------	------------

■ 세부 공약별 각 후보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서술 기록

아래 내용은 답변서 혹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후보들의 해당 공약 주요 골자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한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후보별 답변서 내용을 참고할 것.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16대 공약 관련	문제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 고교 체제 단순화 및 고교 선지원 후추첨 전면 도입 등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 (*학생 우선선발권 없애나, "선지원 후추첨 언급 없음")	특별한 대책 없음	△외고/자사고/국제 선지원 후추첨, △과학교/영재고 위탁교육기관 전환(*"선지원 후추첨" 언급 있으나, 일반고와의 선발 시기 일치 없음)	△외고/자사고 폐지하고, △개별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로 전환하고, △선발시기 일원화, △국제중 일반중으로 전환
2. 수능 절대평가 혹은 대학입학보장제 등 혁신적인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논술, 특기자 전형 폐지하고 △대입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 전형 3가지로 단순화(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하고 장기적 수능 자격고사화	특별한 대책 없음	△대학별 논술고사, 어학특기자전형 폐지하고, △(장기적) 학생생활 및 자율 진로 탐색 기록부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 선발, △수능 자격고사화	△대학별 논술 폐지하고, △대입을 학생부, 면접과 수능으로 단순화(학생부 '교내 수상경력' 반영 금지), △(장기적) 수능 자격고사화	△대입은 수능·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 3가지로 단순화, △고른기회전형 두배 확대하고,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2-1.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완화 대책	3단계에 걸친 지역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및 대학 연합 방안	동일 지역내 대학간 MOU	△제직자 전형 넓히는 등 입학 경로 다양화로 문턱 낮추고, △지역 대학 네트워크 연합	지방대학 지원	대학 연계협력 촉진법 제정해 대학 네트워크 수립(교육과정 클러스터→공동학위→통합전형)
3. 질 높은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 변경하고, △대학 경상비 지원,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등	특별한 대책 없음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개선 및 확대, △고등교육예산 확대 등	재정지원사업 개선 등 대학 자율성 강화	대학 연계협력 촉진법 제정해 대학 네트워크 수립(교육과정 클러스터→공동학위→통합전형)
4.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는 대책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하고, △단계적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 도입	법제정 검토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공공부문 한정)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하고,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학교 미기입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5. 고졸자·지방대 출신자 등의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대책	△지방대 30% 이상 채용할당준수 법률적 강제, △공정기업 인증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고졸학생 취업보장제도 추진 등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학교 기입 금지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6.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직업 간 임금 차별 획기적 완화 대책	△공공기관 고졸 채용할당제 검토 추진, △중소기업의 기업장려지원금 확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특별한 대책 없음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청년고용보장계획 실시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2년간 1,200만원) 등	△비정규직 채용 제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추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임금 조성),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최저임금 인상, △고졸취업 장려금 지원 등
7. 심야 학원 학습이나 일요일 영입 등 학	△초등에만 학원휴일 휴무제 도입하고, △	특별한 대책 없음	필요성 인정했으나 특별한 대책 없음	법 개정 후 시도조례로 위임	△심야교습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한,

생 설을 위협하는 학 원 영업 시간 제한 방 안	심야교습제한 학교급 권고				△학원일요휴무제 실 시
8. 나쁜 사교육의 대 표 상품인 '사교육 기 관의 선행교육 상품' 을 규제 방안	문제의식은 있으나 특별한 대책 없음	특별한 대책 없음	특별한 대책 없음	특별한 대책 없음	학원과 방과후학교의 선행상품 규제
9. 한글/영어 조기교 육 및 영유아의 과도 한 학원 사교육 부담 문제 해결 방안	아동인권법 제정	특별한 대책 없음	특별한 대책 없음	특별한 대책 없음	'영어유치원' 등 선행 상품 규제
10.국공립 유치원, 어 린이집 70%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40% 로 확대하고, △일부 사립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전환	△개발사업자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확보 의무 부과하고, △공 공형 사립 유치원 도입 등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 이상 확 대하고, △공립 유치 원 이용률 40%로 확 대	국공립/법인/직장/공 공형 어린이집 이용 률 70%로 확대	△유아 3년 공교육화, △국공립유치원 40% 로 확충
11. 자격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확대	확대	특별한 대책 없음	확대	확대	확대
12. 창의적 인재 양성 위한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 극복 방안	△중학교 일제식 평 가 폐지하고, △고등 학교 교사별 평가 도 입(절대평가 검토)	특별한 대책 없음	△관찰·기록 중심 과 정 중심 평가, △ 초· 중등 최소기준 기초학력 측정	△팀 프로젝트 강조 하고, △객관식 지필 고사 축소, △결과 아 닌 과정중심 교육	△절대평가, 서술·논 술평가, 과정·교사별 평가 개선, △학생성 장중심 교육과정-수 업-시험-학생부 일체 화
13. 현행 자유학기제 를 중학교 전체와 고 교로 확대하는 방안	△자유학기제 내실화 하고, △자유학년제 로 확대	△자유학기제 내실화 하고, △자유학년제 로 확대	자유학기제 내실화	△자유학기제 내실화 하고, △두 학기 자유 학년제로 확대	△자유학기제 내실 화하고, △자유학년 제 확대 협조
14.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 차 해소 위한 방안	△교육과정 줄이고, △초중 1수업 2교사 제 실시하며, △기초 학력보장법 제정	△학습종합클리닉 확 대 등	△초· 중등 방과후학 교 지원센터 설치, △영어, 수학 학습 컨설팅 및 학습지원	△'거꾸로교실' 등 다 양한 수업 방식 도입 하고, △지능형 학습 지원시스템 개발	△수학·영어 교육과 정 및 교과서 개선하 고, △학습종합클리닉 확대하고, △교육복지 우선사업 내실화·확 대
15.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 화, 문예체 교육 강 화, 학습부진 학생 책 임교육 등	△고교학점제, 학제 유연화하고, △혁신 학교 전국적 확대하 며,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초등 돌봄 6학년 확대 등	특별한 대책 없음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제, △교사 행정 업무 지원, △교원성 과급제도 재검토, △ 학생부 개선, △학생 인권법 제정 등	△수강신청제 도입해, △자연스럽게 무학년 제 전환	△일반고 선택과목 중심으로 무학년제 실시하고,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 △ 직업계고 확충, △혁 신학교 확대, △초6, 중2, 고1 한반 20명 등
16. 국가교육위원회 등 독립적·장기적 교 육 정책 수립 및 실행 방안	△국가교육회의 설치 후, △국가교육위원 회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 (기타)	△'부모교육' 학교 실 시하고, △교사재교 육시스템과 교사양성 시스템 개선	특별한 대책 없음	2-5(초)-5(중)-2(진로 학교)로 학제 개편	대입제도/고교유형/ 교육 과정/교육평가 등의 학교제도 법제 화	교육공무직 등 비정 규직 문제 해소

우리의 요구 및 향후 계획

1.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대선 후보들은 18대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외교,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화 전환 전략으로서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고 동시 선발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동시 선발’이 ‘선지원-후추첨’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동시 선발 없는 선지원 후추첨(안철수 후보)도 문제이지만, 선지원 후추첨 없는 동시 선발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만일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교 등의 일반고 전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선지원-후추첨 제도 도입으로 수정 발표하기 바랍니다.
2. 대선 후보들은 ‘나쁜 사교육 억제 공약’(학원 선행 사교육 상품 근절, 학원 일요 휴무제, 학원 심야 교습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합니다. 당장의 ‘나쁜 사교육’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다른 좋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따라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기존 공약을 수정해서 발표하기 바랍니다.
3. 오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각 캠프가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약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 추천 16개 공약에 대한 추가 수용 의사를 4월 28일까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때까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는 5월 4일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최종 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 사교육 관련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단지 국민들이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도록 안내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및 의회가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 및 의회가 사교육 경감 관련 국민 추천 16개 공약을 입법화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후속 조치 및 관련 운동을 조만간 시작할 것을 예고합니다.